KWDI 해외통신

2025년 4월 (2025.4.1~4.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응급 피임약 무상 제공: 여성의 생식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진전

이 지 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 2025년 말부터 영국 전역의 여성들은 지역 약국에서 응급 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on)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와 영국 지역 약국(Community Pharmacy England) 간의 지원금 협의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로, 약국 서비스 확대의 일환이다. 보건사회복지부는 2년간 총 6억 1,700만 파운드(약 8,000억 원)를 투입하여 지역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처음으로 응급 피임약까지 확대한다.

- 여성의 생식 자율성과 응급 피임약
  - 응급 피임약은 일반적으로 '사후 피임약(Morning-after pill)'으로 불리며 피임 실패, 피임 없는 성관계, 성폭력 등의 상황에서 임신을 예방하는 약물이다.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해야 하며, 복용 시점이 빠를수록 효과가 좋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여성이 다양한 이유로 이 약을 제때 구하지 못하고 있다. 흔히 "레보넬(Levonelle) 같은 응급 피임약은 이미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반응이 있지만, 이는 약사의 상담이 필요한 조건부 판매로, 일반의약품처럼 선반에서 바로 구매할 수는 없다. 약사의 부재나 재고 부족, 상담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 등으로 인해 실제 구매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결국 형식적인 판매 가능성과 실질적인 접근성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 영국 임신 상담 서비스(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 BPAS)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들이 의무 상담 때문에 약을 구하는 것을 꺼리거나, 약국의 재고 부족과 약사의 부재로 인해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20%에 달한다고 한다. BPAS 환자 중 상당수는 "부끄러움 때문에 응급 피임약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응급 피임약만을 피임 수단으로 사용하는 여성은 약 33%에 불과해, 응급 피임약이 광범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필요할 때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여성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 응급 피임약은 그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현재 약사나 의사 상담 없이도 구매 가능한 파라세타몰(paracetamol)이나 니코틴 대체 요법(nicotine replacement therapies) 등보다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응급 피임약 역시 불필요한 절차 없이 일반의약품처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정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 현재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NHS)에서는 응급 피임약을 일반의(General Practice, GP) 또는 성 건강 클리닉(Sexual Health Clini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지역별 정책과 예산 차이, 나이 제한 등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여성이 여전히 약값을 지불하고 약을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최대 30파운드(약 5만 6천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일부 지역 약국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응급 피임약 자체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지역 간 격차는 '우편번호 복불복(Postcode lottery)'이라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보건사회복지부 장관 스티븐 키녹(Stephen Kinnock)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약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은 여성 건강 관리에 핵심이자 공정한 사회의 초석이며, 모든 여성이 거주지나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를 통해 응급 피임약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고, 여성들이 동등하게 약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정책은 특히 긴 일반의(GP) 대기 시간, 예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응급 피임약 복용 시점인 72시간 이내에 약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성 건강 클리닉 역시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급히 방문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 신뢰도가 높고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약국을 통해 응급 피임약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 BPAS 대표 하이디 스튜어트(Heidi Stewart)는 "정부의 무상 제공 확대와 지역 격차 해소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배정과 약사 대상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응급 피임약을 일반 판매 의약품(General Sales List)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약국 선반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접근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0년에는 레보넬(Levonelle)이 전문의약품에서 약국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된 전례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현재의 응급 피임약도 재분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 응급 피임약 무상 제공 확대는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여성의 생식 자율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여성들이 시간, 지역, 비용 등의 제약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평등과 보건 정의 실현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응급 피임약을 일반의약품처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여성들은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몸과 삶의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UK GOV (2025.3.31.), "New services for patients under record pharmacy funding deal",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services-for-patients-under-record-pharmacy-funding-deal (접속일: 2025.4.14.)
- NHS UK (2024.1.31.), "Emergency contraception", https://www.nhs.uk/contraception/emergency-contraception/ (접속일: 2025.4.19.)
- BBC (2025.3.30.), "Morning-after pill to be made free at pharmacies in England", https://www.bbc.co.uk/news/articles/c8eprd9n5plo (접속일: 2025.4.14.)
- The Guardian (2025.3.30.) "Morning-after pill to be offered without charge at pharmacies in England",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5/mar/30/morning-after-pill-contraception-free-pharmacies-nhs-england (접속일: 2025.4.14.)
- 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 (2025.3.31.), "BRAS comment on government's free morning-after-pill announcement", https://www.bpas.org/about-bpas/press-office/press-releases/bpas-comment-on-governments-free-morning-after-pill-announcement/ (접속일:2025.4.14.)

벨기에 BELGIUM

벨기에, 육아휴직 제도 개편 관련 동향

곽 서 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 벨기에는 올해 1월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이후가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올해부터 변경된 벨기에의 육아휴직 급여방식은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휴가가 끝난 후에 급여를 받는 것보다 매달 수령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적절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는 언어권별 지역에 따라 육아 관련 정책의 세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번 지급방식 개편은 벨기에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1] 본고에서는 이러한 최근 제도적 변화를 다루면서 벨기에의 육아휴직과 관련된 주요 내용 및 동향을 개괄하고자 한다.

- 벨기에에서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4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자격이 주어지며,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 각자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 기간은 상대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만 21세로 그 사용 기한이 대폭 연장된다.

- 벨기에 육아휴직은 모두 4가지 유형이 있으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시 다음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국가고용청[2]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급여는 육아휴직 사용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육아휴직 사용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4개월 휴직 일괄 사용
  2) 반일제 근무하며 8개월 휴직 사용
  3) 1/5 근무하며 (본인이 계약한 일 근로시간의 20% 근무) 20개월 휴직 사용
  4) 1/10 근무하며 (본인이 계약한 일 근로시간의 10% 근무) 40개월 휴직 사용

  - 이는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유형을 고를 수 있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마지막 네 번째 유형 (1/10 근무하며 40개월)의 경우는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네 가지 육아휴직 유형 외에도, 고용주가 동의하면 전일제 및 반일제 부모 휴직을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고용주가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

- 이 밖에도 벨기에 연방 정부는 다양한 육아 휴직 제도를 통합하고 동시에 확대하려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바로 가족 크레딧(family credit) 제도다. 정부가 벨기에 전역에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가족 크레딧 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부모에게 주어지던 육아휴직의 권리를 아동에게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즉, 부모와 상관없이 각 아동은 일정량의 육아휴직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 크레딧 제도가 도입되면 육아휴직은 부모가 아니라 아동에게 연동된다. 지난 2월에 발표한 벨기에 연방정부의 <2025-2029 연방 연립정부 협약>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 외에도 조부모나 양육 부모 등 해당 아동과 관계가 있는 다른 성인 보호자들이 나누어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가족 크레딧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동별로 주어지는 크레딧을 조부모의 휴직 사용이나 부모 양측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부 내용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해당 제도는 각 아동당 동일한 가족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벨기에에서 직군, 공공분야 또는 민간분야 종사 여부, 자영업자 여부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시행되던 육아휴직의 세부 내용을 통일하고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더불어 향후 이러한 가족 크레딧 제도의 도입 및 실시를 위한 예산 확대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 벨기에 전역에 걸쳐 이행되는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개편으로 올해부터 부모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가 아니라 매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보험사[3], 고용주, 관계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 측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한 가족 크레딧 제도는 향후 실제로 이행되기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Belgium.be (2025.2.12.) "Regeerakkoord van de federale regering Bart De Wever", https://www.belgium.be/nl/publicaties/regeerakkoord_van_de_federale_regering_bart_de_wever (접속일: 2025.4.16.)
- De Standaard (2025.2.4.) "'Familiekrediet' aan verlofrechten voor ieder kind", https://www.standaard.be/cnt/dmf20250203_96184968 (접속일: 2025.4.16.)
- Mijntoeslagen (2025.1.13.) "Ouderschapsverlof 2025: recht op extra vrije dagen", https://www.mijntoeslagen.be/familie/ouderschapsverlof/ (접속일: 2025.4.16.)
- The Brussels Times (2024.12.27.) "Parental leave allowances to be paid monthly from 1 January", https://www.brusselstimes.com/1370791/parental-leave-allowances-to-be-paid-monthly-from-1-january (접속일: 2025.4.16.)
- VRT News (2025.1.27.), "2024 was recordjaar voor ouderschapsverlof: elke maand maakten meer dan 100.000 mensen er gebruik van", https://www.vrt.be/vrtnws/nl/2025/01/27/ouderschapsverlof-recordjaar/ (접속일: 2025.4.16.)

1) 벨기에는 프랑스어(남부 및 브뤼셀 수도권), 네덜란드어(북부), 독일어(동부)를 사용하는 지역이 나뉘며 각 지역 및 언어공동체에 따라 각자 다른 행정 및 법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언어권별 사회, 문화적 특성도 상이하다.

2) 벨기에 국가고용청 명칭도 지역별로 다르다. 불어권 지역에서는 Office National de l'Emploi, ONEM), 네덜란드어권 지역에서는 Rijksdienst voor Arbeidsvoorziening (RVA), 독일어권에서는 ADG(Arbeitsamt der Deutschsprachigen Gemeinschaft)이다. 이 기관들은 사회보장 및 고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다. 실업수당, 병가, 육아휴직 등 노동 관련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관리하고 고용 촉진 정책 이행을 관할하고 있다.

3) 벨기에에는 정부의 전반적인 제도적 관리 및 자금 지원 하에 여러 개의 '상호 보험사(mutualit⊠, mutualiteit, 또는 Krankenkasse)'가 있다.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로, 벨기에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의 상호 보험사에 등록해야 한다. 단, 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재정적 재원은 국가 사회보장제도이며, 상호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보험, 육아휴직, 병가 또는 실업 급여 등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를 관리 및 실제 지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